



기후변화와 빈곤문제도 해결 못 하는

이명박 정부가 11월에 열리는 G20의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금융기구 개편, 둘, '코리아 이니셔티브' 라고 하는 개발이슈와 금융글로벌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의제들은 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닐 뿐더러, 실현 가능성이 없다.

말만 무성한 국제공조- 금융규제개혁의 실패, IMF 악몽의 재현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G20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세계가 제2의 대공황에 빠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G20은 국제 공조에 거듭 실패해왔다. G20은 2008년 11월에 보호주의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개 회원국 중 17개국 정부가 최소 47개에 이르는 무역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또 조세피난처 규제는 논쟁 끝에 합의하지 못했고, 은행세 도입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자신이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에, 국제공조는 말만 무성할 뿐,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G20은 다시 한 번 IMF를 구제금융 채권자로 만들었다. 최근 IMF는 97년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긴축정책을 강조하면서 구제금융을 지원한 나라들에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예산 축소를 요구했다. 헝가리에 공공서비

스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7퍼센트씩 삭감하라는 긴축 조치 조건을 제시했고, 마이너스 12퍼센트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라트비아에는 재정 지출 추가 축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IMF는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앞으로 2년간 성장률이 7퍼센트나 줄어들 거라고 말했다. 긴축정책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제 2의 IMF가 될 금융글로벌 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쉽게 말하면, '금전'이 필요한 국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IMF가 유동성 위험이 있어 보이는 국가들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돈을 빌려주고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돈을 빌려주고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 그 둘 중에 나은 것은 없다. 이걸 아시아판 IMF를 만드는 데서 한국이 중심 구실을 하겠다는 야심이 표현된 것일 뿐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악몽이 될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명박이 주장하는 개발이슈는 바로 빈곤국 지원이다. 그러나 G20의 빈곤 해결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화다. 그러나 아프리